

## 대학등록금정책과 등록금후불제

글: 김소현(고양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동결, 현실은 대학생 평균등록금

#### 67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하여 청년과 서민 가계부담 가중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등록금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생 1명이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21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673만3천500원으로 지난해(672만5천900원)보다 7600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연평균 등록금은 의학(976만1천

원)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773만4천800원), 공학(721만800원), 자연과학(679만5천800원), 인문사회(592만8천800원)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760만9천 원)이 비수도권(619만2천600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아르바이트에 시달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청년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의 대부분을 학생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중·장년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대학은 엘리트교육에서 보편교육으로 변환되었으며 국민의 절반이 대학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 문재인정부 반값등록금정책 추진,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차원의 대학교육

#### 재정지원은 미비

문재인정부는 올해 8월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등록금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과 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대학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2020학년 기준 국가장학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전체 대학생 중 32.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학등록금부담 완화정책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2021년 교육예산 70조 9,707억의 15.9%(11조1천455억 원)만이 대학교육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대학교육비의 평균 68.2%를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부담은 28.6%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정부가 38.1%를 부담하고 나머지 61.9%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어 대학등록금에 대한 개인부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지원 및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OECD 평균인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에게 집중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 대학교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대학등록금후불제, 고등교육 공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등록금후불제란 국가가 학생 대신 등록금을 선납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는 취업 이후 발생한 수입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상환하며 실업상태에 있거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소득수준의 기준보다 낮으면 상환이 중지된다. 영국은 등록금상환 소득 기준선이 월수입 1,657파운드(2,664,704원)로 이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수입으로 2,000파운드를 급여로 받았다면 상환소득 기준선 1,657파운드보다 343파운드가 많다. 그래서 343파운드의 9%에 해당하는 30파운드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역사와 문화, 제도가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는 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에 진입하고 학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등록금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해 보이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이자율, 가계소득수준, 상환기준선, 평균 성적유지 등의 자격조건, 대출금 상환의 부담으로 다수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등록금후불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한다.

현재 등록금후불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과제와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대학학령인구의 감소와 국가의 미래비전이자 성장 동력인 인재양성을 고려한다면 대학등록금후불제를 포함하여 고등교육 공공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